

윤석열 “조국 수사 결과 없는 것 아냐…보안 더 각별”

“알권리·공권력통제 필요하나 인격권 침해없게 유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한 달 넘게 수사했으나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하자 “이 사건

뿐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 혐의 내용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우스개 얘기지만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했지만 나온 게 없다는 얘기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쪽에서 많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저희가 수사 내용이 바깥

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틀어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관 사건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대검에 오고 난 뒤 수사 공보를 글로 벌 스탠다드(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번 수사에 들어갈 때 보안 절차를 더 밟고 다른 사건에 비해 더 각별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는 밀행성이라도 변호사 입회 하 대동해 피의자와 참고인이 수사받으러 다니니 100% 틀어막긴 어렵다”면서도 “알 권리나 언론의 공권력 통제도 필요하나, 이 과정에 놓인 개인이 망신당하거나 인격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왔고 앞으로 다른 어떤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이 점을 더욱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이 발표한 자체개혁안 중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사공보가 실제 어떻게 이뤄지는지 법무연구관을 통해 자료를 받아 국제협력단과 일해서 수사공보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언급했다.

뉴스1

윤석열 “‘윤중천 접대’ 보도 한겨레에 사과받아야겠다”

“개인 아닌 검찰에 대한 문제…취재 과정 밝히고 사과한다면 고소 재고해볼 것”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이른바 ‘윤중천 접대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대상 국정감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니) 고소 취소하라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들은 보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도 윤 총장이 한겨레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사의 제목을 쓰면서 마치 총장이 부당한 접대를 받은듯한 인상을 독자가 갖게 한다”면서도 “검찰 총책임자인 총장이 일반 누리꾼과 같이 고소하면 일반 시민들도 무슨 문제 생길 때마다 고소하는 문화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무소속(대안신당) 의원도 보도에 대해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는데 고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물었다.

윤 총장은 “저는 지금까지 누굴 고소해본 적이 한번도 없다”며 “이런 사건 할 땐 이쪽 진영, 이쪽 사건 할 땐 이쪽 진영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을 해도 고소를 하

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란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 하나가 언론으로서 해야 하는 확인(취재) 없이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진술에 관해 수사단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보도는 총장이 별장에서 윤씨에게 접대받았다는 내용을 독자들에게 인식시키는 내용이다. 계속 후속보도를 했다”며 “만약 취재과정을 다 밝히고 명예훼손이 된 부분을 사과하고 지면에 실어준다면 고소를 유지할지에 대해 재고해보겠다”고 밝혔다.

뉴스1

조국 떠나자 文에 돌아오는 중도층…국정동력도 살아날까

중도층 3주만에 반등…44.9→39.7→33.5→39.2%

‘조국 정국’을 거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돌아섰던 중도층이 다시 돌아오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회복세를 타고 있다.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6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3주차 주중동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4.1%p(포인트) 오른 45.5%로 조사됐다.

앞서 2주간 하락하며 40%대 붕괴가 우려됐던 상황에서 반등에 성공해 40%대 중반을 회복한 것이다.

특히 중도층의 움직임이 지지율 반등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2달 넘게 조국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보수-진보 양 지지층이 결집하는 가운데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한 것이 문 대통령 및 여당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이 같은 중도층 민심 이반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에서는 조국 사태 장기화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사에서 중도층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39.2%로 지난주(33.5%) 대비 5.7%p 높아지며 3주 만에 상승 반전했다. 중도층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앞서 9월 4주차 44.9%에서 39.7%, 33.5%로 2주 연속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 왔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반등에 대해 그동안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취가 사퇴로 결정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문 대통령 지지율을 하루 단위로 살펴보면 지난주를 40.4%(11일)로 마감한 후 이번 주 들어 조 전 장관이 사퇴를 발표한 14일 42.2%로 반등한 후 15일 45.4%, 16일 46.5%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탔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 사퇴에 따라 여권을 향한 민심의 추가 악화가 일단 멈춘 것으로 보면서도 당분간 추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반쪽 회복세에 그칠지에 대해선 신중한 분위기다.

한편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 5.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스1

보수통합 ‘공감대’ 형성했지만…황교안·유승민 손 잡을까?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수통합을 위해 손을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수통합의 난관은 △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정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위한 비상행동(변혁) 입장 단일화 △안철수 전 대표 등관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유 의원은 최근 “날만 잡히면 황 대표와 만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는 등 보수통합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황 대표도 “문재인 정부 의 폭정 막기 위해선 자유민주세력이 하나가 돼야한다”고 화답하는 등 보수통합을 위한 대화의 발판 마련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유 의원과 황 대표의 발언은 당장의 보수통합이 아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통합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발언이라는 게 정치권 인력의 시각이다.

앞서 유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한국당이 탄핵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입장을 분명히 해야만 보수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보수통합의 조건으로 한국당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보수통합의 또 다른 문제는 변혁 내부의 의견 통일이다. 바른정당 출신 8명과 국민의당 출신 7인으로 구성된 변혁 내부에서는 당장 탈당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바른정당 출신인 하태경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11월 내로 창당이나 12월 내로 창당이나 이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히는 등 탈당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민의당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17일 YTN라디오 방송에서 변혁의 성격에 대해 “호남 중진 의원이나 변화와 혁신에 지금은 함께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과의 소통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지속적인 보수통합설은 국민의당 출신 의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비례대표가 대다수인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로서는 탈당을 결심한다고 해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손 대표의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

안 전 대표의 등판은 보수통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안 전 대표의 입장이 확정돼야 변혁의 단일화된 입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전 대표가 보수통합에 힘을 실을 경우 ‘당 대 당’ 통합에 준하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안 전 대표가 보수통합에 부정적인 경우 보수통합은 바른정당계 8명의 행동으로 그치면서 보수통합의 불씨 역시 약화될 전망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